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04
(2020. 05.22)

Sejong Policy Brief

코로나19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hlee@sejong.org

차례

핵심요약

- I.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평가
- II. 코로나19 대응 양상: 무엇이 차이를 낳았나?
- III.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국제정치적 변화
- IV.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
- V.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요약

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대체로 그동안 선진강국으로 여겨졌던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심각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양호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

- 주요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차이를 초래
- 첫째, 거버넌스 역량(민주주의, 언론 자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 둘째, 공공의료 체계의 수준(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보험)
- 셋째, 리더십의 판단과 결단력(적시 대응의 중요성)

②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국제정치적 변화

- ① 반세계화 정서의 부각, 반이민 정서 심화
- ②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와 탈-G2현상 가속화
- ③ 서구 우월주의의 후퇴
- ④ 레짐 붕괴(regime meltdown) 현상의 가속화
- ⑤ 경제적 침체로 인한 세계 대공황 도래 가능성
- ⑥ 기근 팬데믹(hunger pandemic)의 우려
- ⑦ 국가의 귀환(return of state), 혹은 빅브라더(big brother) 정부의 등장

③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

- 미국과 중국의 협력 촉구 -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글로벌한 노력의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이지만 현재 두 나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상호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고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
-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체적 행동 촉구 -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유일한 대응이 다자주의적인 것이란 점은 명확
- 국제제도의 개선 - WHO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
- 국가안보 이슈로서 신형안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조성

을 위한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

4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에 유의할 필요

- 미중 패권경쟁 가열에 대비한 국가전략 방향성 확립 - 미중 무역전쟁 악화와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
- 중견국의 역할 제고를 통한 위기관리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제고된 한국의 위상을 활용, 유사입장 국가들의 중견국 리더십 확보 기회로 활용 - 이른 바 'K-방역' 성과를 활용
-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동력 창출을 주도
- 민주주의와 대중/대량 감시체계의 조화 문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고려

I.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가 확연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 최근 서력기원을 뜻하는 BC와는 또 다른 역사적 기점으로 ‘BC(Before Corona)’ 라는 표현 등장 -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로 역사 풍경과 사회 경로가 확연하게 갈릴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표현임.
 - 과거에도 팬데믹이 있었지만 지금 세상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 디지털화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의 시대’ 를 재촉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¹⁾
 - 반면에 코로나19 이전 최대 팬데믹이었던 스페인 독감(1918~20년) 때도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전면적인 구조 변동까지 야기되지는 않았다는 반론도 있음. 이번에도 변동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풀릴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됨. 9/11 이후에는 전세계가 알카에다 테러의 위협에 공동 대처했지만 코로나 19는 현 무정부적 국제질서 내의 경쟁을 종속시키지 못할뿐더러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조직원리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²⁾
-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
 -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함.
 -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
 -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대표적이며, WHO가 1948년 설립

1) Henry A.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20.

2) Nikolas K. Gvosdev, “Why the Coronavirus Won’t Transform International Affairs Like 9/11 Did,” *The National Interest*, May 5, 2020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why-coronavirus-wont-transform-international-affairs-911-did-151126>).

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H1N1)와 코로나19 등 세 차례에 불과

○ 현재까지 드러난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 상황(2020.05.22. 현재)³⁾

- 확진자 509만6천명, 사망자 33만1천명
- 사망자 상위 10개국 현황

국명	확진자 수	5월 15일 이후 증감		사망자 수
		숫자	비율	
미국	1,570,154	133,941	+9%	93,436
영국	252,246	14,242	+6%	36,124
이탈리아	228,006	4,121	+2%	32,486
프랑스	181,951	2,321	+1%	28,218
스페인	233,037	2,854	+1%	27,940
브라질	310,087	89,796	+41%	20,047
벨기에	56,235	1,591	+3%	9,186
독일	179,021	3,788	+2%	8,203
이란	129,341	12,706	+11%	7,249
멕시코	59,567	14,535	+32%	6,510

- 사망자 수로 보면 코로나19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감염병 가운데 에볼라 1만1천300명, 사스 770명, 메르스 850명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⁴⁾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본 정책브리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둠. 현재까지 제기되는 주요 분석의 논점들은

- (1) 세계화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 (2) 미중 간 리더십 교체와 패권경쟁 전망에 대한 논쟁, (3) 국제질서에서 서구의 주도권 상실, (4) 신항안보 이슈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5) 언택트(Untact·비대면) 경제의 부상 등 디지털화와 생활 및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한 예측, (6)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전망, (7)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의 복귀와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 등으로 전개

3) 도표 좌상은 코로나19 확진자(단순 계수) 분포, 우상은 인구비례로 조정된 분포이며, 좌하는 사망자 분포(단순 계수), 우하는 인구비례로 조정된 분포임. 출처: *The Washington Post*, "Mapping the worldwide spread of the coronavirus," May 11,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world/mapping-spread-new-coronavirus/?hpid=hp_hp-banner-low_resourcebox-v3%3Ahomepage%2Fstory-ans).

4) "Visualizing the History of Pandemics," Visual Capitalist 웹사이트 (<https://www.visualcapitalist.com/history-of-pandemics-deadliest/>) 자료 참조.

II. 코로나19 대응 양상: 무엇이 차이를 낳았나?

- 애초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 미국과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발생
 - 중국, 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진입했지만 선진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코로나 팬데믹은 거의 모든 국가들의 강점과 약점을 노출 - 특히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의 피해가 막심, 미국은 현재까지 베트남전 전사자보다 많은 6만명 이상이 사망
 - 주요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차이를 초래: 첫째, 거버넌스 역량 - 민주주의, 언론 자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둘째, 공공의료 체계의 수준 -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보험; 셋째, 리더십의 판단과 결단력, 적시 대응의 중요성
 -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가 대응방식의 차이를 낳고, 결과적으로 국가간 큰 편차를 나타냄.

- 코로나19는 과연 국제적 위기인가?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는 현 상황은 엄청난 위기의 서막이라고 진단
 - 그에 의하면 위기의 첫 번째 단계는 세계 경제 대국들의 의료관리 위기고 그다음은 경제 마비 -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일자리 손실은 이미 심각한 수준
 - 다음에 닥칠 위기는 국가들의 채무변제 불능 상태이며, 그 다음 위기는 개발도상국들 차례 - 인도·브라질·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의 감염자 숫자는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들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교역과 여행의 연결고리가 약했기 때문일 뿐 -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타격 불가피
 - 다음은 산유국들 차례 - 이미 무너져 내린 석유 수요가 반등하기는 힘들 전망 - 이런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석유 수입이 국가 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리비아·나이지리아·이란·이라크와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들은 치명적인 타격 불가피⁵⁾

- 미국의 코로나 대응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 리더십과 공중보건 및 사회안전망의 결여가 주된 원인⁶⁾

5) 파리드 자카리아, “[해외칼럼] 현 상황은 엄청난 위기의 서막,” 『서울경제』, 2020.04.0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DD51B5Z/GG03>).

6) Katrin Bennhold, “Sadness and Disbelief from a World Missing American Leadership,” *The*

-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오로지 제2의 9/11을 예방하는 데 모든 국력을 집중 - 그러나 새로운 9/11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
-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있던 감염병 대응조직을 해체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예산도 삭감 - 2010년 이후 대테러에는 연간 평균 1천800억불을 지출한 반면 팬데믹과 감염병 대응에는 20억불 지출 - 2019년 국방예산은 6천8백50억불 인 반면 CDC 예산은 70억불에 불과⁷⁾
- 미국은 의학 수준과 신약 개발 등 의료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마스크와 호흡기, 인구비례 병상 수, 진단시약 등 기초 의료 설비 및 서비스에서 큰 허점을 노정 (미국내 유통 마스크의 80%는 중국산)

○ 중국의 실패

- 초기 우한 코로나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신뢰를 상실
- 실질적인 코로나 퇴치 노력보다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제선전전, 여론전에 치중 - 이른 바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를 시도했으나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용품 제공으로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 실추
- 코로나19 은폐는 ‘중국의 체르노빌(Chernobyl Moment)’ 이라 불릴 정도로 폭발성 있는 사안으로 간주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오히려 이를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기제로 활용⁸⁾ - 2008년 쓰촨 지진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내세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뒤 나라가 흥한다(多難興邦)’ 는 식의 민족주의 정서 동원, 재난 민족주의(disaster nationalism)로 대처

○ 유럽의 성공과 실패 사례

-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롬바르디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확산 - 유럽은 초기에 코로나19를 ‘심한 독감’ 정도로 치부하며 강력한 예방에 나서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보면 1-2월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역에 확산
- 이탈리아는 5월 22일 현재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선 수준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이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이 모두 사망자 2만 명을 넘어선 상황

New York Times, April 23, 2020

(<https://www.nytimes.com/2020/04/23/world/europe/coronavirus-american-exceptionalism.html>).

7) Samantha Power, “How the COVID-19 Era Will Change National Security Forever,” *TIME*, April 14, 2020

(<https://time.com/5820625/national-security-coronavirus-samantha-power/>).

8) Chenchen Zhang, “Covid-19 in China: From ‘Chernobyl Moment’ to Impetus for Nationalism,” *Made in China Journal*, May 4, 2020

(<https://madeinchinajournal.com/2020/05/04/covid-19-in-china-from-chernobyl-moment-to-impetus-for-nationalism/>).

- 반면 이들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은 6천 명 정도로 사망자의 수를 통제했고,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
-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국제정치적 효과는 유럽통합의 핵심 기둥을 순식간에 붕괴시켰다는 사실 - 유럽통합의 가장 가치적인 효과는 유럽연합 내부의 국경이 사라졌다는 점이지만 이 오랜 통합의 성과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완벽하게 붕괴⁹⁾

○ 아시아의 성공과 실패 사례

- 아시아 국가들 중 대만·홍콩·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국경통제와 강력한 억제정책을 도입하여 대량감염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
- 한국은 국경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적극적인 검사·추적·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할 유일한 경우로 긍정적 평가
-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의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립 등 다양한 창의적인 최선 관행(best practice)을 창출하여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른 바 ‘K-방역’ 모델로 호평¹⁰⁾
- 반면에 일본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집단감염에 대한 혼란스런 대응 이후 아베 총리의 톱다운 대응 방식의 혼선이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
- 일본은 사스사태, 메르스사태에서 피해가 적었던 탓에 방역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도 중국 시진핑 방일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인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올림픽을 고려하여 방역대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됨.¹¹⁾

○ 코로나19 같은 초국가적 위협 대응에 있어서 드러난 국가들 간 차이를 구별하는 두 가지 축¹²⁾

- 첫째는 전체주의적 감시 vs. 시민사회 역량 -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전체 주민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음. 정부가 주민을 감시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식(중국, 이스라엘)은 대량감시 기술을 활용, 이는 표피적 감시(over the skin) 방식에서 심층적 감시(under the skin)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며, 흔히 피감시자는 감시당하는 줄도 모르고 감시당하는 상황

9) 조흥식, “코로나19 위기와 유럽의 대응,”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0년 제9호(2020.05.07.)

10) 전봉근,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8, pp. 4-6.

11) 진창수, “코로나19 사태와 일본 정국 동향,”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제10호(2020.05.11.).

12) Yuval N.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 프라이버시 vs. 공중보건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 -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가동하지 않고도 팬데믹에 대처하는 방법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사례임. 성취동기가 강하고 잘 교육된 대중은 무지하고 통제된 대중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함. 이러한 자발적 준수와 협력이 가능하려면 과학과 정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 요건이며,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민성(citizenship)에 대한 테스트
- 둘째는 국가주의적 고립 vs. 글로벌 연대 - 감염병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이며, 글로벌 차원의 조율된 협력은 필요 장비나 약품 생산과 분배를 돕고, 의료인력의 활용에도 도움 - 하지만 최근 팬데믹 대응에서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마비현상이 두드러지고 책임질 ‘어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

III.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국제정치적 변화

1. 반세계화 정서의 부각, 반이민 정서 심화

- 세계화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킨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도 주요 원인
 - 세계화에 관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은 세계화가 그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점을 부각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최우선시하여 슬랙(slack, 유희경제력)의 최소화를 초래 - “재고는 기본적으로 악이다, inventory is fundamentally evil” (Apple CEO 팀 쿡)라는 말처럼, 필요한 부품을 창고에 쌓아두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필요할 때 세계시장에서 즉시 조달
 - 정상적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유희경제력이 너무 적을 경우 위기가 오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는 결과 초래¹³⁾
 - 물류와 교역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상품에 특화하고, 노동분업과 상호의존도 심화 - 극도로 효율적이지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극도로 취약한 체제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각국이 수출을 통제하거나(핵심 의료물자나 전략물자) 생산시설의 국내 유치(리쇼어링)를 강화할 경우 세계화의 전반적인 퇴조 예상

13) 유희경제력(economic slack)이란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는 부분 - 산업생산 능력이나 주택, 고용 등이 얼마나 사용되지 않고 유희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표현하는 개념; Henry Farrell and Abraham Newman, “Will the Coronavirus End Globalization as We Know It?” *Foreign Affairs*, March 16,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20-03-16/will-coronavirus-end-globalization-we-know-it>).

2.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와 탈-G2 현상 가속화

-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약화 - 미국도, 중국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G-zero 상황 가속화
 - 미국은 리더십에 관심이 없으며 스스로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는 중이고, 중국은 아직 ‘책임있는 이해상관자’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¹⁴⁾
 - 최근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코로나 퇴치 글로벌 공약 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e Conference)’에서 80억불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했으나 미국은 이에 불참 -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G7 그룹을 통해 이미 코로나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으며 바이러스 퇴치와 인도적 지원에 24억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주장¹⁵⁾

-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온 것은 패권의 물적 토대인 경제력, 효율적인 국가체계, 굳건한 동맹체제 등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한 바, 코로나19는 미국내경제 침체와 실업을 폭등, 트럼프 행정부의 비효과적인 대응, 동맹과 우방에 대한 리더십 발휘 실패 등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
 - 2008년 금융위기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당시 미국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과 대조적 상황¹⁶⁾
 -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어려움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국 정상이 3월 16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을 강구했으나 트럼프의 ‘우한 바이러스’ 표현 삽입 주장 때문에 공동선언 합의에 실패했고, 3월 26일 개최된 G20 화상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

-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는 강대국 정치, 각자도생의 각박한 국제정세로 인한 초국가적 협력의 유인 부족을 초래

14) Yukon Huang and Jeremy Smith, “Pandemic Response Reflects Unlearned Lessons of U.S.-China Trade Wa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il 27, 2020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04/27/pandemic-response-reflects-unlearned-lessons-of-u.s.-china-trade-war-pub-81651>).

15) Matthew Petti, “Trump Administration Defends No-Show At Global Coronavirus Conference,” *The National Interest*, May 4, 2020 (<https://nationalinterest.org/print/feature/trump-administration-defends-no-show-global-coronavirus-conference-150936>).

16) Ashley J. Tellis, “COVID-19 Knocks on American Hegemon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y 4, 2020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05/04/covid-19-knocks-on-american-hegemony-pub-81719>).

- 여론전, 심리전 양상으로 새로운 패권경쟁 전개될 가능성 - 중국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코로나 실크로드’ 를 적극 추진
-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틈을 타 중국은 성공적인 방역을 홍보하는 한편 90여개 국가에 의료 및 방역물품,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코로나 외교에 속도를 올리는 상황
- 미중 간 디커플링 -- 무역전쟁, 과학기술 패권경쟁, 식량안보 문제로 격돌하는 상황 도래 가능성 - Ex) 인도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 미중은 서로를 비난하는 여론전, 선전전 가열, 세계는 반중국과 친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가능성

3. 서구 우월주의의 후퇴

- 서구, 미국의 허점이 노출되고, 세계질서는 더 이상 서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탈서구중심화 가속화
 - ‘서구의 실종(West lessness)’ 이라는 2020년 뮌헨안보회의 보고서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서구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각¹⁷⁾
 - 흔히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국제협력, 국제제도 등과 연관되어 상대적으로 단합된 지정학적 실체였던 ‘서구(West)’ 라는 개념은 비자유주의적, 국가주의적 정서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분열’ 을 겪는 중이며 ‘장벽과 경계(walls and borders)’ 의 부활 현상 초래
 - 유럽은 주요 국제문제에 직접 해결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만 반복하면서 위상 하락을 자초
 - 코로나19로 인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 이라는 관념 속 깊게 내재된 서양 우월주의는 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도래

4. 레짐 붕괴(regime meltdown) 현상의 가속화

- 최근 수년간 국제규범과 레짐의 약화는 뚜렷한 추세
 - 최근 수년간 국제제도 및 레짐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퇴조는 뚜렷한 추세를 이루며, 레짐 붕괴(regime meltdown)로도 불리는 상황
 - 미러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지, 미-이란 핵합의인 JCPOA 탈퇴, 미국의 Paris Climate Agreement 탈퇴, 북한과 이란으로 인한 NPT 체제의 약화, 자국이익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로 인한 free trade 레짐의 약화, 길거리 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democracy의 위기 등이 주요 사례

17) “Munich Security Report 2020 - Westlessness.” Munich Security Conference

-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와중에도 2021년 대외원조 예산을 21% 삭감하기로 결정한 바, 이는 세계보건 프로그램 지원금의 35% 삭감을 포함하며 WHO 지원금의 50% 삭감에 해당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개혁 움직임 대두

-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지원 중단 필요성까지 제기
- WSJ는 ‘논설위원실(the Editorial Board)’ 명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의 실패에 대한 비난 대부분은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¹⁸⁾
- 미중간 감정적 대립과 비판 속에 WHO는 ‘Wuhan Health Organization’이라는 조롱까지 등장

5. 경제적 침체로 인한 세계 대공황 도래 가능성

○ 글로벌 무역의 감소와 공급망 붕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 불가피

- 블룸버그는 주요 20개국(G20)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개월 전 전망치보다 무려 6.3%포인트 삭감한 -3%로 수정 전망
- 해외 수요위축과 공급망 마비는 과거 위기 시의 보루였던 우리나라 수출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확실시
- 실제로 1-3월 전년 동기 대비 -1.4%였던 수출은 코로나19의 주요국 확산과 함께 4월 1-20일 기간 -26.9%로 급락 - 향후 실물·고용부문 침체가 금융·자산부문으로 전이되는 복합불황마저 우려¹⁹⁾

○ 반면에 온라인 쇼핑이나 बैं킹 같은 언택트(untact) 경제는 크게 부상

- 넷플릭스, 구글 등 온라인 기업은 큰 혜택을 받고, “Travel less and Zoom more” 같은 새로운 추세 등장
- 중국은 전자화폐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 - 중국은 5월 1일부터 장쑤성 쑤저우, 광둥성 선전, 쓰촨성 청두, 허베이성 숭안 신구 등 4개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용
- 스웨덴은 지난 2월부터 ‘e-코로나’를 도입했고, 2개월간 시범 운용한 결과가

18) “World Health Coronavirus Disinform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5, 2020.

19) 김인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 잡으려면,” 『파이낸스뉴스』, 2020.04.30. (<https://www.fnnews.com/news/202004291743263201>).

기대보다 훨씬 좋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확정

-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차제에 아예 로봇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 방향으로 가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증가한 실업률 해소 부진 등 전반적인 경제회복의 지연, 아시아 동맹국들의 대미 실망감 등으로 인해 예전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제기 -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은 한국이나 중국은 일정 부분 피해 불가피

6. 기근 팬데믹(hunger pandemic)의 우려

- 세계식량계획(WFP) 자료에 의하면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2020년 말까지 중·저소득국가 주민 2억6천5백만 명이 심각한 식량위기(IPC/CH 등급 3 혹은 이상)에 봉착할 전망이다²⁰⁾
 - 이는 2019년 말 1억3천5백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이 증가한 숫자 - 이들 대부분은 내전 등 분쟁지역(7천7백만), 기후변화(3천4백만), 혹은 경제/금융위기(2천4백만)를 겪고 있는 지역에 해당
- 한국도 식량수급 사정에 유의할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5~2018년 우리나라의 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23%로, 이는 세계 평균 101.5%에 크게 밀도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 쌀은 자급률이 104.7%에 이르지만, 보리와 콩은 각각 24.6%, 옥수수 3.7%에 불과, 밀은 전체 소비량 중 99.1%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²¹⁾
 - 2020년 4월 기준 식용 곡물(밀, 콩, 옥수수) 재고 보유량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창고와 항만 보유량과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1~3개월 사용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쌀과 콩을 제외한 타 곡물의 정부 비축은 미미하고, 민간의 의무비축제도 없는 상황 - 현재까지 주요 곡물 수출국(미국, 남미,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의 항구봉쇄 조치는 없는 상황이므로 단기적 어려움은 없으나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두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단가가 전월 대비 상승함에 따라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예상
 - 장기적으로 주요 수출국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 확산과 항구봉쇄 단행 시 유의미

20) "COVID-19 will double number of people facing food crises unless swift action is taken," World Food Programme, 21 April 2020 (<https://www.wfp.org/news/covid-19-will-double-number-people-facing-food-crises-unless-swift-action-taken>).

21) "[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 KBS 뉴스, 2020.04.0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436>).

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²²⁾

7. 국가의 귀환(return of state) - 빅브라더(big brother), 혹은 거대정부의 등장

- 국가의 개인 감시역량 강화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 아시아 국가들의 공중보건 우위 시각 vs. 서구 국가들의 프라이버시 중시 시각의 차이
 - 국가위기시에 한번 강화된 국가의 역량은 위기가 끝나도 다시 축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문제 - 9/11 테러 이후 국가감시체제의 강화
 - 코로나 독재의 합리화, 보건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의 남용, 시민적 자유의 제한 같은 국내정치 문제를 초래 - 문제는 한번 고삐가 풀린 정치권력, 비대해진 국가기구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점
 -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 시대 - ‘거대 정부의 진격’ 현상, 위기 대응 능력을 앞세운 권위주의, 나아가 전체주의 국가가 출몰할 전망

IV.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

1. 미국과 중국의 협력

-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글로벌한 노력의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
 - 하지만 지금 두 나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상호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고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 - G7 회의에 뒤이어 열린 G20 회담도 성과 없이 종료
 -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촌 차원의 협력이 무너지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가운데 발생²³⁾
 -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이미 강대국 정치, 각자도생의 각박한 국제정세로 인한 초국가적 협력의 유인 부족 - 여기에다 미중간 여론전, 심리전 양상으로 새로운 패권경쟁이 전개될 가능성
 - 중국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적극 활용할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코로나 실크로드’를 적극

22) 박성진·박지원·강두현·안정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 『KREI 농정포커스』, 제187호(2020.04.21.), pp. 15-17.

23) 파리드 자카리아, “[해외칼럼] 현 상황은 엄청난 위기의 서막,” 『서울경제』, 2020.04.0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DD51B5Z/GG03>).

추진 -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틈을 타 중국은 성공적인 방역을 홍보하는 한편 90여개 국가에 의료 및 방역물품,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코로나 외교에 속도를 올리는 상황

- 코로나 백신 개발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
 - 만일 미중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제질서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일부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성벽국가’로 갈 우려
 - 무역과 여행, 인적 교류 등이 지금처럼 제한되면 국제경제는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침체, 반세계화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
 - 우선 미국과 중국이 협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그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발신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완화 및 다자적 협력에 일조하는 태세를 유지

2.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체적 행동

-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유일한 대응이 다자주의적인 것이란 점은 명확
 - 모든 사람이 최대한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해야만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최근 독일, 미국, 중국의 제약회사들(바이오엔텍, 화이자, 상하이 포순)이 백신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전개
 - 세계 지도자들과 언론이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줘야 하며, 이런 소식들은 사람들의 사기와 함께 기업들의 자신감도 고취²⁴⁾
- 세계의 주요국들, 특히 G20(주요 20개국) 구성국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세 가지의 과제
 - 첫째,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마스크, 장갑, 진단 키트와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공중보건의 관점과 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자원을 배치하고,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은 WHO(세계보건기구)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하고 모든 참가국이 이 가이드라인에 공식 동의해야 함.
 - 두 번째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할 일은 백신 개발에 필요한 R&D(연구개발) 기금에 투자하는 것 - 3년 전 빌&멜린다 재단과 웰컴트러스트재단은 여러 국가와 협력해 감염병혁신연합(CEPI)을 출범 - CEPI는 최소 2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며, G20 국가 지도자들의 의미 있는 공여 약속이 필요

24) 빅터 차, “바이러스와의 세계적 투쟁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전략,” 『조선일보』, 2020.04.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2/2020041201764.html).

- 세 번째 과제는 CEPI 기금은 백신 개발만을 위한 것이며 생산과 배송물류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금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가격 -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함.²⁵⁾

3. 국제제도의 개선

- WHO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
 - 미중간 WHO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제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 미국내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9/11 진상조사위원회(9/11 Commission) 같은 초당파적이고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²⁶⁾
 -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있던 감염병 대응조직을 해체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도 삭감 - 2010년 이후 대테러에는 연간 평균 1천800억불을 지출한 반면 팬데믹과 감염병 대응에는 20억불 지출 - 2019년 국방예산은 6천8백50억불인 반면 CDC 예산은 70억불에 불과²⁷⁾

4. 국가안보 이슈로서 신종안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전통안보 이슈보다 피해가 크고 대처가 더 어렵다는 점을 부각
 - 한국은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동맹, 북한문제 등 전통 안보문제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기후, 환경, 해양오염, 고령화 등 재해재난에 정책 차원의 실패가 겹쳐져 상황이 악화되는 인재(人災)에 대비할 필요성 부각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

25) 빌 게이츠, “코로나 종식 위한 세 가지 과제,” 『아시아투데이』, 2020.04.1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412010007185>).

26) John J. Farmer, Jr., “How to Get the Truth About the Pandemic: It is Time for an Independent Commission on COVID-19,” *Foreign Affairs*, May 4,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print/node/1126005>).

27) Samantha Power, “How the COVID-19 Era Will Change National Security Forever,” *TIME*, April 14, 2020 (<https://time.com/5820625/national-security-coronavirus-samantha-power/>).

○ 신홍안보 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 코로나19는 본질적으로 초국가적이고 다자적인 이슈 - 대응도 초국가적이고 다자적 해법이 가장 효과적
-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등이 제기한 연성안보/비전통안보 이슈에서의 동북아 다자협력을 지향한다는 정책 명분(rationale) 거의 실종상태
- 한국도 코로나19를 초국가적, 신홍안보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 인식의 계기로 삼아야 함.

V.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합의

○ 미중 패권경쟁 가열에 대비한 국가전략 방향성 확립

- 우선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에 대비 - 미중 무역전쟁 악화시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며 해외 수요위축과 공급망 마비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확실시
- 미국의 무작정 ‘중국 때리기’에 한국이 선불리 동참할 수는 없으며, 원론적이지만 드러난 정황과 증거에 입각해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천명 - ex) 예를 들어, INF 체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희망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과 유사
- 미중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 - 한국으로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바, 우리 외교·안보·경제의 portfolio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함.

○ 중견국의 역할 제고를 통한 위기관리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 WHO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중의 태도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와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세계시민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은 물론이며, 향후 생태, 환경, 보건 등 글로벌 차원에서 다뤄야할 다양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다자주의 내지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반한 공공외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을 발굴하고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함.

-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제고된 한국의 위상을 활용, 유사입장 국가들의 중견국 리더십 확보 기회로 활용 - 이른 바 ‘K-방역’ 성과를 활용
 - 미국,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평가로 인해 중견국 외교는 역설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음
 - 국제보건, 방역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 - 유사입장 국가들의 중견국 리더십 확보 기회로 활용
 -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서는 코로나19 공동방역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호기가 될 가능성 - 북한과 공중보건 협력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용품과 약품을 긴급 제공토록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감안하여 WHO,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등 의료 NGO들을 적극 활용²⁸⁾

-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동력 창출을 주도
 - 한중일 삼국협력(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 TCS 위상 제고 및 활용), 박근혜 정부의 동평구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활력 주입 계기로 활용
 -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에 북한도 끌어들이므로써 한반도 평화변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해야 함. 다만, 장기적으로 동북아 협력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단계에서 너무 북한 유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올인하는 것은 부적절

- 민주주의와 대중/대량 감시체계의 조화 문제
 - ‘침해적 대중 감시체계(intrusive massive surveillance)’ 가 아닌 ‘민주주의적 감시체계(democratic surveillance)’ 는 가능한가? 한국형 방역모델의 성공에 만족하고 시민적 자유의 제한은 외면할 것인가 하는 민주주의 시각에서의 근본적 문제 제기도 고려해야 함.
 - 국가위기시 대응조치는 흔히 위기가 끝나도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예를 들면 9/11 이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한 광범위한 시민적 자유의 침해와 감시 체제가 이에 해당
 - 한국의 경우 전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확진자 발생시 개인 동선(動線)과 프라이버시가 다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 - 개인 전화기에 앱 설치, 안심밴드(전자팔찌) 착용 강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고려

28) 전봉근,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8, pp. 18-19.

[부록] 역대 팬데믹 피해

Name	Time period	Type / Pre-human host	Death toll
Antonine Plague	165-180	Believed to be either smallpox or measles	5M
Japanese smallpox epidemic	735-737	Variola major virus	1M
Plague of Justinian	541-542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30-50M
Black Death	1347-1351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200M
New World Smallpox Outbreak	1520 - onwards	Variola major virus	56M
Great Plague of London	1665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100,000
Italian plague	1629-1631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1M
Cholera Pandemics 1-6	1817-1923	V. cholerae bacteria	1M+
Third Plague	1885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12M (China and India)
Yellow Fever	Late 1800s	Virus / Mosquitoes	100,000-150,000 (U.S.)
Russian Flu	1889-1890	Believed to be H2N2 (avian origin)	1M
Spanish Flu	1918-1919	H1N1 virus / Pigs	40-50M
Asian Flu	1957-1958	H2N2 virus	1.1M
Hong Kong Flu	1968-1970	H3N2 virus	1M
HIV/AIDS	1981-present	Virus / Chimpanzees	25-35M
Swine Flu	2009-2010	H1N1 virus / Pigs	200,000
SARS	2002-2003	Coronavirus / Bats, Civets	770
Ebola	2014-2016	Ebolavirus / Wild animals	11,000
MERS	2015-Present	Coronavirus / Bats, camels	850
COVID-19	2019-Present	Coronavirus - Unknown (possibly pangolins)	271,700 (Johns Hopkins University estimate as of 9:32am PT, May 7, 2020)

출처: Visualizing the History of Pandemics, May 11, 2020.

(<https://www.visualcapitalist.com/history-of-pandemics-deadliest/>).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